

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 (미사강변동일하이빌)

의안 번호	287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4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관련법규 및 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5항(사회복지시설의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)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9조, 제12조
- 「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, 제6조
- 「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」 지침(보건복지부)

2. 제안사유

-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, 보다 전문성을 갖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『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』 제7조 규정에 의거 하남시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위치	규모	정원
다함께돌봄센터 (미사강변동일하이빌)	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85-4	97.66 ㎡	29명 (아동 1명당 3.3㎡)

○ 위탁내용

- 위탁자: 하남시장
 - 수탁자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 - 위탁기간: 위·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
 - 위탁방법: 재위탁
 - 위탁내용: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(시설물 유지, 조직·인력 구성 등)
 - 운영시간: 14시~20시(학기중) / 09시~18시(방학중)
 - 프로그램: 아동지원, 독서지도, 놀이활동 등 필수활동 프로그램과 기초
외국어, 예체능, 과학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
 - 채용인원: 4명
- ※ 센터장 포함(센터장 1명, 돌봄교사 3명 *전일제, 틈새돌봄, 아침돌봄)

○ 소요예산(24년 4월~12월) : 94,432천원 [8개월분]

지원내용	계	산출내역
인건비	72,63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센터장(8시간) 1인 : 월 3,434천원 × 8개월 = 27,472천원 · 전일제 돌봄교사(8시간) 1인 : 월 2,705천원 × 8개월 = 21,640천원 · 틈새 돌봄교사(4시간) 1인 : 월 1,470천원 × 8개월 = 11,760천원 · 한시적 아침돌봄교사(4시간) 1인 : 월 1,470천원 × 8개월 = 11,760천원
각종 수당	4,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225천원 × 8개월 = 1,800천원 ·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월 300천원 × 8개월 = 2,400천원
운영비	16,000	· 월 2,000천원 × 8개월 = 16,000천원
틈새 프로그램	1,600	· 50천원 × 2시간 × 월2회 × 8개월 = 1,600천원
계	94,432	

4. 수탁자 선정방식

- 기존 수탁기관인 ‘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(이점복)’가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사무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우선 추진

5. 적정성 검토 의견

분석기준		분석내용	분석결과	비고
공 공 성	㉠서비스 중요성	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	높음	초등학생의 방과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, 아동 및 학부모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큼
	㉡서비스 수혜대상	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주민인지, 불특정 지역 생활권의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 대상 주민의 범위	보통	서비스 수혜대상은 미사동 소재 재학 초등학생 아동으로 수혜 주민의 범위는 보통임
	㉢서비스 공급의 지속성	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, 중단가능성,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	낮음	위탁기간 5년으로 재위탁 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
	㉣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	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,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	높음	아동의 돌봄 서비스로 공급중단 시 피해가 큼
효 율 성	㉤민간의 전문성 활용	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,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	높음	민간위탁 시 법인/단체의 인력풀을 활용하므로 보다 다양한 돌봄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음
	㉦경제적 효율성	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, 조직 확대 방지, 비용절감(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) 정도 등	높음	민간위탁에 따른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및 자부담, 후원금 등 기타 세입충당을 통해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함
	㉧사업성과 측정 용이성	공공서비스 공급 목표, 사업계획의 합리성,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	낮음	돌봄 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가 비가시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움
	㉨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	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,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(경쟁, 독·과점 등),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	높음	법인/단체 간 경쟁을 통해 아동을 위한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	㉩관리운영의 투명성	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,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	높음	최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수탁자로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가능
☞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(미사강변동일하이빌) 운영 사무에 대해 위와 같이 분석한 결과 공공성(2)에 비해 효율성(4)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 수행이 적정함.				

※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.10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(안) 참고

6. 향후 추진계획

- 2024. 5. : 사무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
- 2024. 5. : 위·수탁 운영협약 체결

7. 붙임

- 붙임 1 : 성과평가 결과
- 붙임 2 : 관련 법령 및 조례

성과평가 결과

평가지표		평가방법	배점	득점
영역	세부지표			
아동권리	1. 아동의 권리보장	운영규정, 종사자의 학대 금지 서약서,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증 등	15	15
	2.. 개인정보 보호조치	운영규정 중 비밀보장 관련 항목,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증,	5	5
안전	1. 비상 상황 대응 능력	안전관리계획서(①소방계획서, ②피난계획서, ③응급대처매뉴얼, ④비상대응훈련계획서	10	10
	2 안전사고 예방 및 대피	① 소화설비(소화기구), ② 경보설비(시각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 등), ③ 피난보조설비(유도등, 유도표지), ④ 다함께돌봄센터 안전·시설 관리 점검표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규정,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증서	10	10
운영기반	1. 운영규정	다함께돌봄센터 운영규정	10	10
	2. 사업계획서	위탁기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	5	5
	3. 사업결과보고서	위탁기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결과보고서	5	5
운영위원회	운영위원회	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, 운영위원회 회의록	5	5
돌봄서비스	1. 출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	아동관리일지, 공통 또는 학습활동 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서류	10	10
	2. 운영일지	위탁기간 동안 운영일지	10	10
종사자	종사자 교육	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한 종사자 교육 이수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료증 또는 이수증)	5	5
센터장 인터뷰	리더십	평가항목에 제시된 질문을 센터장에게 제시 센터장은 질문별로 2분 내외로 답변	10	10
총점			100	100

1 아동복지법

[시행 2024. 2. 9.] [법률 제19605호, 2023. 8. 8., 일부개정]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 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15.]

2 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51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제목개정 2011. 8. 4.]

3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 7. 14] [보건복지부령 제950호, 2023. 7. 13., 일부개정]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⑤선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1. 3.>

[본조신설 2004. 9. 6.] [제2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

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- 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4

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[시행 2023. 05. 01.] [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, 2023. 05. 01., 일부개정]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2023.5.1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<개정 2023.5.1.>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5.1.>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<개정 2023.5.1.>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23.5.1.>

제9조(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<개정 2023.5.1.> ① 수탁기관 선정, 성과평가, 재위탁,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1. 1. 12., 2023.5.1.>

1. 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<신설 2021. 1. 12.>, <개정 2023.5.1.>
 2.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<신설 2021. 1. 12.>
 3.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<신설 2021. 1. 12.>
 4.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<신설 2021. 1. 12.>
 5.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신설 2021. 1. 12.>,<개정 2023.5.1.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<개정 2023.5.1.>
-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1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
 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·기술사·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<개정 2023.5.1.>

3.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<개정 2023.5.1.>
4.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, 사회적경제 전문가<개정 2023.5.1.>
5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-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. 12., 2021. 3. 12.>

- 제12조(계약체결 등)<개정 2023.5.1.>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12.>
-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, 위탁기간, 위탁내용, 수탁자의 의무, 예산지원 한도액,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사항 및 의무이행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. 12.>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 <신설 2021. 1. 12.>

5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3. 11. 23.] [경기도하남시조례 제2247호, 2023. 11. 23., 일부개정]

- 제3조(명칭 및 설치) ① 돌봄 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각 센터별 고유 명칭을 병기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, 마을회관, 아파트 커뮤니티센터, 도서관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한다.

제6조(운영)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·운영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9. 3.>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3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4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-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.
- ③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1.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(별지 2호 서식)
2.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
3.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)
4. 삭제 <2019. 9. 3.>
5. 다함께돌봄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6. 돌봄센터 운영 계획서(운영 및 유지방법 등을 포함)
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센터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9. 3.>
1. 이용 아동의 급·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
 2.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9. 3.>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 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⑦ 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9. 3.>